

1. 주식회사 감사제도 개요 8
2. 미국의 회계 관련 고발자 포상금 지급제도 9
3. 감사인 지정 사유 10
4. 미국 PCAOB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개요 ... 11

I. 주요 Q&A

1. 상장회사에 대해서 선택지정제를 도입한 구체적인 배경과 논리는?

1. 현황 및 검토배경

- 현재 외부감사인 선임제도는 자유수임제(회사가 자유롭게 선정)를 기본으로 일부 직권지정(감독당국이 회사의 감사인을 임의선정) 시행중
 - '16년 기준 상장회사 총 1,958개사(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 중 134개 회사(6.8%)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
- * 비상장회사의 경우 '16년 기준 25,015개사(외감대상) 중 감사인 지정 : 337개사(1.3%)
- 최근 대형 회사, 대형 회계법인이 회계부정(분식회계, 부실감사)에 연루되면서 선임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
- 회계업계를 중심으로 현행 자유수임제는 甲-乙 관계를 형성하여 낮은 보수 등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 다만, 기업계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감사인 지정은 잘하고 있거나 문제가 없는 기업까지 감사인이 강제 교체되어 선의의 피해를 양산하는 등 매우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정책이며,
 -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지적 가능성을 의식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시킬 가능성이 있고,
 - 6년 기준의 경우 감사인이 수시로 자주 교체되어 기업의 경영에 애로를 야기하거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

2. 수임제도 개편 논의 및 제시안

- 그동안 회계학회에서 회계제도 개편 용역 수행(상장협·코스닥협·한공회 공동발주) → 용역결과, 선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

※ 회계학회 제시안

- ① (지정제 확대) 현행 지정사유 확대 → 더 많은 회사에 감사인 지정
- ② (혼합선임제) 상장회사에 대하여 9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3년간 지정감사(주기적 전면·강제지정제)
- ③ (공동감사제) 6년 자유수임후 1년은 회사가 추가 선정한 회계법인이 기존 감사인과 동시감사(joint-audit)

※ 主-副 감사인을 구분하여 '副 감사인'의 기능은 '主 감사인'의 감사절차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한정하여 운영

- 상기 3가지 제시방안에 대해 선호는 없으며, 어느 방안을 채택해도 무방하다는 의견 제시

※ (한공회·상협·코협 주관 토론회, 16.12.13일) 전면지정, 혼합선임제 등 주장(회계업계) vs. 지정 보다는 처벌 강화 필요(기업)

3. 개편 기본방향

-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등 굴지의 대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국내 2위의 안전회계법인이 대규모 부실감사에 연루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선임제도에 대폭적인 변화는 필요
- 다만, 외부감사 독립성을 제고하면서도 선의의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개편
- 자유수임제를 대폭 보완하는 「감사인 지정제 확대」 중심의 선임제도 개편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에 우선 적용)
- 전면지정 감사제는 시행하지 않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회사는 자유선임에서 배제되도록 제도 설계

4. 주요 개편내용

[1] **직권지정제(현행 지정제) 확대** ⇒ 상장회사의 약 10% 적용 예상

□ **제재·징벌적 성격의 감사인 지정사유를 추가**

- ① 분식회계로 **해임권고**(제재종료후 5년內)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前歷** 임원이 있는 **상장회사**(재취업 포함)
- ② 거래소 규정상 **공시 불이행**, **공시번복·변경** 등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별점 4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③ **내부고발자 불이익조치 회사**, **선택지정 대상회사** 중 감사인 사전 입찰가 확인 등 **부정행위 적발 회사**

< 최근 4년간 상장회사(코넥스 제외)의 감사인 직권지정 비율 >

구 분 (단위:사)	'13	'14	'15	'16
지정 상장회사 수(A)	62	73	129	134
전체 상장회사 수(B)	1,761	1,797	1,901	1,958
지정비율(A/B)	3.52%	4.06%	6.79%	6.84%

[2] **선택지정제 도입** ⇒ 상장회사의 약 40% 적용 예상

□ **(제도 개요)** 현행 직권지정제와 자유수입제를 보완하는 실행 가능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선택지정제**를 신규 도입

-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이중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로서,
- 지정 이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3년만 감사한후 더이상 당해 회사에 대해 감사 제한 → **보수 덩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연장에도 신경쓸 필요가 없는 바, 독립적 회계감사 가능**

- ✓ 회사의 감사인 선택권 일부 보장 → 회사 업종·특성을 고려 가능
- ✓ 지정감사제도의 취지상 공정하고 독립적인 외부감사 실시 가능
- ✓ 전면 직권지정시 발생가능한 시행상의 부작용, 실무적인 애로에 대응 가능(별첨 1 참조)

□ **지정대상**

- ① **(경제적 영향)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 금융회사
*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 ② **(취약) 비교적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
 - i) (지배구조) **소유·경영 미분리**, **짚은 최대주주 변경**
 - ii) (재무상황) **최근 소액공모 / 최대주주 등 자금대여 /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 iii) (기타) **투자주의환기종목(코스닥)**, **감사전 재무제표 지연제출**, **동종업종·유사규모 회사 대비 감사시간 투입이 현저히 적은 회사**

③ **(회계투명성 유의업종)** 예) 수주산업

□ **(예외사유 규정)** 지정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사유는 **예외 인정**

- ① 증선위가 정하는 **외국 증권거래소에 유가증권을 상장**
- ② **외자 도입계약에 따라 특정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 회계학회 영역에서 제시한 **Dual audit**(공동감사제)는,

- 主-副 회계법인간 감사범위나 법적 책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고, 경험과 사례도 축적될 필요
- 또한 시행하는 나라가 매우 적고(프랑스·독일), 시행하다가 폐지한 나라(캐나다·중국)도 있으며, 시행도 일부 업종에 한정하여 시행
⇒ 단기적으로 Dual audit의 전면 채택은 어려운 바, 선택지정제를 우선 시행하는 가운데, **직권지정시 대안으로 Dual audit을 시범운영하는 방안 검토**

[3] 상장회사 全數감리(자유선임제 보완)

□ 모든 상장회사에 대해 每 10년 주기로 全數 감리를 실시하되, 감사인 지정(직권지정 또는 선택지정)을 받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는 6년 이내 우선 감리

① (조직·인력 확대) 현원(38명) 대비 28명을 증원한 66명의 감리 실무인력을 확충하고 회계감리부서(기획감리실) 추가 신설

② (감리권한 강화) 심사감리시에도 관련 증빙 및 감사조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고, 정밀감리시에는 기존 금융기관 검사와 같이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예외 인정

※ 「직권지정 + 선택지정 + 감리 3층구조」*를 통해 상장회사는 10년內 회계투명성 全數 검증 ⇒ “상장회사 회계점검” 실시

* 직권지정(10%) + 선택지정(40%) + 자유수임회사 우선감리(50%)
(전체 상장회사 10년주기 감리)

2.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또는 영구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인지?

- 선택지정제는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는 아니며,
- 每 10년 주기로 최소 1회 이상은 전체 상장회사 회계 투명성을 점진한다는 기본원칙 하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3. 시간당 최저감사보수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 정상적이고 충실한 외부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 되는 것은 높은 감사보수 보다는 적절한 감사인력 투입과 감사시간 확보임
- 감사보수는 ‘가격’으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주체간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
- 회사별 자산규모, 업종 등, 회계법인의 능력 등에 따라 감사보수가 책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최저감사 보수를 정하는 것이 불가능
- ‘회계제도 개혁 TF’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감사보수를 규정화하기 보다는
- 회계업계 자율적으로 적절한 감사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방향으로 논의

4. 회계에 있어 내부감사(감사, 감사위원회)가 중요한데, 내부감사 기능 강화내용은 무엇인지?

- 내부감사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
 - 경영진과 독립적 입장에서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및 위반 우려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재무제표 및 영업 보고서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함
 - 내부감사가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나 법령 등 위반 사항을 알게된 경우 그 내용을 감사인에 통보하도록 함
- 한편, 정부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제도가 도입('00년~)된 이후 동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보수결정 등 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외감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 내부감사가 실질적인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내부감사의 조사·조치권한 부여,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을 이번 대책에 포함
 - ❶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내부감사는 독립성·적격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시정조치 → 그 결과를 증선위 감사인에 동시제출
 - ❷ 내부감사·외부감사인간 커뮤니케이션 내용·빈도에 대한 공시의무 마련 및 적절한 외부감사인 선정여부 확인을 위해 감사인 선임과정에 대한 공시의무 강화

※ 감사인 선임 관련 주요 공시대상(예시) :

- 감사인 선임경과(감사인선임위원회·추천위원회 운영경과 등)
- 과거 3년간 선임방식(자유수임/지정), 자유수임 방식(수의계약/공개입찰)
- 독립성 훼손여부 : 최근 3년간 감사·비감사용역 수행현황 등
- 외부감사인 선임시 적용한 감사능력 평가기준 등

II. 참 고 자 료

참고 1 주식회사 감사제도 개요

- 감사·감사위원회는 회사규모나 상장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치·운영(상법)되며, 상장회사 및 대형 비상장회사 등은 외감 대상

* ①자산총액 120억 이상, ②주권상장회사 또는 차년도 내 주권상장회사가 되려는 주식회사, ③부채총액이 70억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이상 주식회사, ④종업원수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 이상인 주식회사

회사 유형	감사기관(선임기관)	비 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비상장회사	감 사 (주주총회)	감사 미설치 가능 → 이경우 주총이 권한 행사
자본금 1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감사(주주총회) 또는 감사위원회(이사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택 가능
자산총액 1천억 미만 상장회사	감사(주주총회) 또는 감사위원회(이사회)	
자산총액 1천억 이상 2조원 미만 상장회사	상근감사(주주총회) 또는 감사위원회(이사회)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주주총회)	감사위원회 의무적 설치

<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 비교 >

구 분	감 사	감사위원회	감 사 인
기관	지위	회사 내부기관 (업무·회계감독)	회사의 기관아님 (회계감독)
	성격	단독·독립기관	합의제기관,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상근 또는 비상근감사	3인 이상 이사 (2/3 이상 사외이사)
	대상	모든 회사	모든 회사(선택적) / 2조이상 상장사(의무적)
선임/해임	수	1인 이상	3인 이상
	선출	주주총회	이사회 (2조이상 상장사는 주총)
	임기	3년	규정 없음
	자격	자격요건 없음	사외이사 자격제한 (상법 §382 ③)
의무/책임	직무	업무감사·회계감사	업무감사·회계감사
	對회사	임무해태책임	임무해태책임
	對제3자	악의·중과실	악의·중과실

*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3 회계연도간 동일 감사인 선임 의무화 추진 중

참고 2

미국의 회계 관련 고발자 포상금 지급제도

□ 증권거래법 제21A조 제(e)항(붙임)

- “정보제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권한”에서는 내부고발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SEC 또는 법무장관은 증권적 사기를 행한 자 등에 대하여 민사제재금을 부과 할 수 있으며,
 - 포상금은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민사제재금액의 1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
- 또한 이 규정에 의한 지급여부, 지급을 받을 자, 지급액의 산정 등 모든 결정권한은 SEC의 재량이며 중립적이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Sarbanes-Oxley Act 제308조 (FAIR fund)

-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몰수펀드에 과징금(민사제재금)을 편입 하도록 규정

* '02년 Sarbanes-Oxley법(Section 308(a) 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Provision) 제정으로, SEC가 위반자들에게 금전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액을 직접 부과하여 펀드를 구성(SEC가 펀드의 피해자 배분도 담당)

□ 내부회계고발자에 대한 포상금과 과징금(민사제재금) 운영

- 증권거래법에 따라 과징금(민사제재금)을 피해자 구제를 위한 FAIR 펀드에 편입하기에 앞서 **同 민사제재금의 10%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

참고 3

감사인 지정 사유

외감규정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건수	
		'15년	'16년
§10①1	① 감사인 미선임	-	5* (%)
§10①2	② 감사인 부당교체 및 선임절차 위반	-	-
§10①3	③ 감리결과 감사인 지정 조치	16 (12.4%)	17 (3.7%)
§10①4	④ 소유·경영 미분리(감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선임시 예외)	-	-
§10①5	⑤ 관리종목	40 (31.0%)	33 (12.7%)
§10①6	⑥ 상장예정 회사	-	-
§10①7	⑦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조치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	-
§10①8전단	⑧-1 회사 요청에 의한 지정	-	3 (2.2%)
§10①8후단	⑧-2 타 법에 의해 관계기관 장이 지정 요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요청 등)	-	1 (0.7%)
§10①9	⑨ 감사보수 미협의를 등으로 감사인이 감사계약 해지권 행사	-	-
§10①10	⑩ 주채권은행의 회사 동의에 의한 지정 요청	-	-
§10①11	⑪ 공인회계사법 §21/§33를 위반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
§10①12	⑫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회사에 대한 지정 요청	-	-
§10①13	⑬ 부채비율 과다 상장회사	72 (55.8%)	47 (35.1%)
§10①14	⑭ 일정금액 이상 횡령·배임 발생 상장회사	1 (0.8%)	10 (7.5%)
§10①15	⑮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회사	-	18 (13.4%)
합 계		129 (100%)	134 (100%)

참고 4 미국 PCAOB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개요

□ (개요) PCAOB는 SEC 등록법인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회계법인을 감시, 감독하기 위한 비영리 기관

* Sarbanes-Oxley Act 2002 규정에 의거해 회계법인 감독기구인 PCAOB(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설립

□ (등록대상) 미국내 공개기업(public company)를 감사하려는 모든 미국 및 외국 회계법인

□ (등록절차) ①PCAOB에 전자지원서 제출 → ②제출일로부터 45일 내에 승인여부 결정(필요시 추가정보 요청) → ③등록불허시 그 사유를 통보하며, 재등록신청 가능

□ (등록사항) 회계법인 개요, 감사대상회사 및 보수, 품질관리정책, 민형사상 조치 및 진행중인 소송, 소속 회계사 현황 등

□ (등록요건) 세부적인 등록요건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며, 등록 사항 및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체적인 심사를 통해 등록을 승인하거나 거부

□ (등록 거부사례)

-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 상장된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발행 후 사후적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 → 대부분의 등록 거부사유
- 등록시 필요한 정보 미기재, PCAOB의 추가적인 정보제공 또는 확인 요청에 대한 불응이나 절차상 하자 등

⇒ PCAOB의 감사인 등록제 취지는 엄격한 등록 보다는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임